

■ 김성호 법무 인선 배경과 정국 전망

당·청 갈등 봉합으로 정치 부담 덜기

임기말 국정운영이 우선, 정면 충돌 회피 노대통령 측근 전진배치 구상 차질 빚어

노무현 대통령이 새 법무장관 인선에서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기보다는 당청간의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국정운영을 택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파문에 이어 당 청간 인사권 갈등이 정면충돌 일보자전까지 확산됐던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문재인 카드'를 접고 김성호 국가철학위 사무처장을 최종 낙점했기 때문에 그 의미와 효과가 배증됐다.

△안정적 국정운영 선택='노심'(盧心)이 '유단'한 것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빨간 불' 신호등을 무시하고 직진하기에는 당청 관계가 예상치 못한 과국을 맞을 수도 있고, 이에 따른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여당 내부에서 5·31 지방선거와 잇단 재보선 참패 원인을 청와대로 돌리며, 노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카드' 강행은 사태의 진전 여하에 따라 정치지향의 급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었다.

노 대통령은 임기말 정책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국정의 유동성이 커지는 것은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인사권 주도 '명분' 유지=그렇다고 '문재인 카드'의 철학과 당의 주장에 밀린 노 대통령의 일방적 양보라고만은 해석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주초까지만 해도 여당 지도의 '문재인 비토론'에 직면, 대통령 인사권 자체가 근본적으로 도전받았고,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퇴진파동까지 겹치면서 '레임덕' 양상으로 명불복을 노 대통령이 끝내 아쉬워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향후 국정기조나 내각 인선구상의 변화가 점쳐지기도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기말 새롭게 대통령 국정철학을 터득해야 하는 분보다는 그것을 깨뚫고 있는 분들을 중용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장관 발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전 수석은 일찍이 임기말을 함께 할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돼 왔던 만큼 다시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의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당청관계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측근 내각 전진배치 구상 차질=노 대통령은 연초 이종석 통일, 유시민 보건복지 장관의 기용에 이어 지난달 정책실장 출신인 김병준 교육,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함께 발탁하면서 최측근 인사들을 내각의 전면에 기용해왔다.

'정치에서의 중립, 정책에서의 코드'라는 기조에서 임기말 정책 추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정책 현안을 물샐틈 없이 집행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인선 흐름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참여정부 정책분야를 총괄해온 김병준 전 부총리의 뜻하지 않은 퇴진에 이은 '문재인 장관' 임명 불발을 노 대통령이 끝내 아쉬워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향후 국정기조나 내각 인선구상의 변화가 점쳐지기도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기말 새롭게 대통령 국정철학을 터득해야 하는 분보다는 그것을 깨뚫고 있는 분들을 중용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장관 발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전 수석은 일찍이 임기말을 함께 할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돼 왔던 만큼 다시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법조 비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관행 전 부장판사 비리 전면 부인

영장실질심사서 직접 검찰과 설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법조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 실질심사에서 민사소송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은 고위 법관 출신답게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검찰과 공방을 벌이면서 심문 내용 중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개입하면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6회원칙에 따라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야 되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밖에 달할 수 없도록 묻는 게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심문 도중 조 전 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며 판사 앞에서 심문 내용 중 피의자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

이 연출되기도 했다.

조 전 부장은 실질심사 직전 '국민과 법원에 큰 누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한다. 하지만 혐의 사실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강용현 태평양 대표변호사도 "피의자가 청탁과 관련해서 험금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일부 돈을 받은 것은 전별금이거나 의례적인 수준의 사교적 성격의 돈이다. 이제까지 검찰 수사에 매번 협조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불구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외부 선장론' 거론된 인사들 시큰둥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외부 선장론'과 맞물려 여권의 영입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건 전 총리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박원순 변호사 등 여당에서 거론되는 외부주자들은 모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더 나아가 불쾌감을 표시하는 인사도 있고, 전략적으로 '노심'(盧心)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도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가장 유력하게 영입 인사로 꼽히는 고건 전 총리는 아예 대응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측근은 "지금 까지 정치적으로 연대하거나 특정 정당에 입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자

신의 정치 기반인 '희망한국 국민연대'가 오는 28일 창립하는 데다 이런 저런 억측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전혀 모르는 얘기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장은 정계 입문설이 나돌 때마다 "아직까지 정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박 변호사는 이어 "(정계로부

터) 요청을 받은 지 벌써 10년도 더 된 것 같다"며 "정치와 시민사회활동이 크게 보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해왔던 일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내 주자들은 '외부 영입'이 민감한 사안인더라 즉답을 피하고 있다.

7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근태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동영 전 의장의 측근은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하신 얘기"라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천정배 전 장관측도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있는게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정계로부

양형 일의원 교육부총리 물망

靑, 다음주 후보자 발표할 듯



학계에서는 신

인령 전 이화

여대 총장과

이운재 고려대

총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

장, 설동근 대

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장

등이 주목

"호남롯 비례대표 5~6명"

강재섭 한나라 대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8일 "호남 롯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5~6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에 스튜디오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전체가 호남 민들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당 대표와 스스럼 없이 만나 의논하는 분위기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